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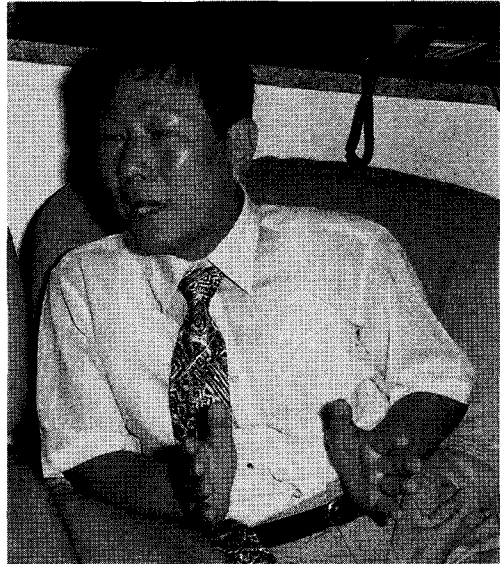
쓰레기문화는 우리세대에서 끝나야 재활용의 건전한 발전에 앞장

임해수 / (가칭) 파주재활용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여 많은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구조의 급속한 공업화로 인해 환경은 날로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93년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폐자원의 재활용과 환경보전에 주력하고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여 더 많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에 온 국민과 정부가 다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21일 (가칭) 파주재활용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선출된 대림산업 임해수 사장은 작금의 현실을 설명하며 당선 소감을 단지조성의 필요성으로 대신했다.

“수거된 재활용 가능자원이 제품생산의 원료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선별, 압축, 파쇄 등 일련의 공정을 거쳐야 되며 이를 위하여는 필요한 시설과 일정한 부지가 필수적으로 소요됩니다. 그러나 필요한 부지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근교에는 개발제한 지역 외에는 500평 이상의 잡종지나 대지를 구하기



▲ 임해수 파주재활용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있다 하여도 가격상으로 채산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작업장으로 쓰고 있는 땅도 주민의 민원이나 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적법한 땅으로 이전해야만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같은 부지 해결책으로써 정부의 시책과

업계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는 1차로 수도권에 교통망과 주변 여건이 적합한 곳에 시급히 재활용단지를 조성하여 이를 토대로 전국에 확산시킴으로써 재활용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판단한다.

실제로 유통구조상의 문제와 비축능력의 열악함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품이 들어온다 해도 국내품은 제대로 소모되지 못하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고, 현재에도 종량제 실시에 따라 주민이 성의를 다하여 분리 배출한 재활용 자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하여 재활용업체에 인계하지 못하고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게 되는 경우의 허다한 모습을 TV보도를 통해 목격되고 있다.

단지조성으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그는 “우선 재활용 가능 각 품목을 30업체가 입주하여 유기적으로 처리할 경우 연간 100만톤의 폐자원을 재활용 함으로써 파주시 일원과 서울시에 발생한 재활용 가능 폐자원을 대부분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간 일부 인기품목을 제외한 기타 품목의 처리에 고심해 온 파주시와 서울시 산하 각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재활용 전용단지가 각 품목을 골고루 인수하여 발생처의 고충을 덜어줌으로써 수도권에서 한 국자원재생공사의 역할을 분담하게 되어 많은 국가예산의 절감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세번째로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파주시 교하면 일대는 땅값이 타지역에 비하여 저렴함으로 영세한 재활용 업계의 안정적 자립

기반구축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 단지 외에도 이미 인쇄와 출판업계가 단지를 조성중에 있으며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유휴지가 많아 지류관련 타업종(제본, 지함 등)도 입주가 가능하며 이러한 업종들은 자체적으로 다량의 폐지를 발생시키는 업종인 바 재활용 단지로 수집케 함으로써 수집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도 기대됩니다”라고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배운 것이 없어 서러움의 시절을 겪어온 임해수 이사장은 지난 91~93년 동안 난지도에서의 생활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회고했다. 700여명의 상인들과 쓰레기더미에 싸여 지내온 것이 큰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과주재활용단지는 앞으로 재활용 폐자원의 회수율 증대와 업계의 지나친 영세성 탈피를 위해 정부의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을 유도할 것이며 지도교육정보사업(세미나, 임직원 연수교육, 방송프로에 참여)과 대정부 활동으로 국내 재활용 폐자원의 우선 사용을 제도화 하도록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사업계획으로 압축용철사 공동구매 사업, 폐지·캔·프라스틱 공동판매사업과 공동시설 운영사업으로 소각로 및 계근대 운영을 할 것”이라며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나라살림과 기업살림을 동등하게 운영해 후손들에게 더 이상의 쓰레기 문화를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

변준섭 기자